

권성동·나경원 표심 어디로... 與 당권레이스 변수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 지지 의사 따라 초반 판세 요동권, 외부 활동 없이 중립모드...나 "역할 공간 없다" 선긋기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로 김기현·안철수 의원 '양강 구도'가 한층 뚜렷해진 가운데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또 나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초반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당권 도전을 고심하다 출마를 접은 권 의원은 전당대회 레이스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지난 5일 불출마 선언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주 이민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해외

에서 상당 시간을 보냈다. 지난 17일 귀국했지만, 여전히 별다른 외부 활동이 없는 상태다.

권 의원은 불출마 회견 당시 "누구를 지지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안 의원과 나 전 의원 간 3파전 구도가 치열했던 만큼, 선불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었다가는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고 해도 '윤핵관 망형'으로서 정치적 입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권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호형호제하며 가깝게 지냈던 장제원 의원이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꾸린 상황에서 친윤계 분란

우려가 커지면서 스스로 당권 도전을 내려놨던 것 아닌가"라며 "권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행보가 당권 레이스에 또 다른 분란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한 듯하다"고 말했다.

주변 인사들이 물어도 "스스로 판단하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내주 전당대회 후보등록(2월 2~3일)이 시작되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 이런 '중립 모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단 나 전 의원 불출마로 선택지는 '친윤'(친윤석열)계가 전폭적으로 미는 김 의원과, '범윤'(범윤석열)계가 전폭적으로 미는 김 의원과, '범윤(범윤석열)계로 평가되지만, 구도상 '비윤'(비윤석열)으로 묶일 수 있는 안 의원 둘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친윤계 의원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안 의원을 선택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다.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핵관'이라는 타이틀을 고려하면 종국적으로 김 의원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권 도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감정의 골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의원을 지원하자니, 본인이 출마를 접으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내부 분란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에서는 내심 권 의원과 '연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 측은 통화에서 "모든 윤핵관을 싸잡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 가령 권성동 의원은 충직한 분 아닌가"라며 "전당대회 경선이 본격화하면 그동안 용산 의증을 왜곡해 당 분위기를 휘젓고 다니는 일부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이 곳곳에서 발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표'의 향방도 변수다. 나 전 의원 역시 불출마 선언과 함께 "전당대회에서 내가 역할 할 공간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주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당원투표 100%'로 치러질 이번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원층 지지세가 두터운 나 전 의원의 연대는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 가능성을 묻자 "당연히, 연대·포용·망형이 그런 의미 아니냐"라며 나 전 의원에 대해 "좋은 동지"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천에서 열린 한 포럼 참석 후 "(나 전 의원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어느 정도 마음도 좀 가라앉고 할 때 한번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읍 찾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순정축협 가축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안철수 신경전 가열

김 "안, 수도권 강점 근거 없어"...안 "공천 공포정치"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26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날 불출마 선언으로 3·8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안 의원의 양자 구도로 재편되면서 당심(黨心)을 노린 두 주자 간 일대일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최근 안 의원이 '공천 공포정치'라며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안 의원은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고 사실상 공개 행보를 하고 있다"며 사천(私薦)·낙하산 공천 등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안 의원이 내세우는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서도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고 수도권에서도 보니까 제 지지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뭘 근거로 해서 수도권이 강점이라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의 자신을 향해 '철새 정치', '여기 기

웃 저기 기웃' 등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당원들 보기에 옳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열심히 도운 게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말씀 아닌가"라며 "제가(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단일화를 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도 잘못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공방전은 양측 경선 캠프로 이어졌다.

김 의원 측 '이기는 캠프'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이 전날 한 유튜브에서 '대통령 관저 만찬 사실을 아내에게 숨겼다, 김 의원 이라면 즉각 언론 속보로 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거짓말"이라며 "전후 사정을 잘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거꾸로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 측 '170V 캠프' 손수조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 하다 갑자기 장(張)을 지우라 하고 '연포장' 하다 갑자기 진흙탕을 만들고 오락가락 김기현 후보의 행보가 조금씩 보인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與, 전대 컷오프 '100% 당원 여론조사' 반영

당원 6000 샘플 가닥...31일 컷오프 '규모·방식' 최종발표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당원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했다.

배준영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완전히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컷오프 때는 본선과 같은 비율, 같은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

사를 통해서 100% (비율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컷오프 규모와 여론조사 방식 등은 오는 31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통상적인 여론조사 방식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6천 샘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만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합동연설회·방송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컷오프를 통과하는 본경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내달 13일 제주에서 첫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열린다. 이어 2월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라, 21일 대전·세종·충청, 28일 대구·경북, 마지막은 3월 2일 서울·인천·경기에서 연설회를 진행한다.

당 대표 방송토론회는 내달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3월 3일 채널A에서 각각 주관한다.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방송토론회는 내달 27일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TV'를 통해 중계된다.

/연합뉴스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개혁' 법령 정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의 속도를 내고자 법제처가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특히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노동, 교육, 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에 해당하는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가 법령을 만들 때부터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적 심사, 공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전날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안을 입안할 때부터 지원하면 이후 심사 과정도 짧아진다. 법령이 빨리 시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 입법예고 과정에서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218건도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상반기 내에 국회에 낼 수 있게 도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